

전남도, AI·우주산업 등 미래산업 이끈다

국가컴퓨팅센터 등 내년 국비 1614억 확보

분산형전력망·민간우주발사체 구축 본격

전남도가 미래 세계경제의 핵심 동력인 AI산업의 글로벌 전초기지 조성을 위해 내년 정부 예산에 AI 분산형 전력망 신산업 육성, 국가 AI컴퓨팅센터 등 총 1614

억원의 AI·우주산업 관련 국비를 확보했다. 이는 전남도가 지난 수년간 추진한 ‘AI 중심지 전남 조성 전략’과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 비전’의 결실로, 대규모 국

가 예산이 반영된 의미 있는 결과다.

전남도는 국내외 데이터 기업과 AI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오픈AI-SK 데이터센터’와 ‘국가 AI 컴퓨팅센터’ 유치에 성공하며 대형 프로젝트의 기반을 다졌다. 이 결과 2026년 국비에 다양한 AI 관련 핵심사업이 반영됐다.

주요 사업은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118억원 (총사업비 2조5000억원), AI 분

산형 전력망 신산업 육성 1196억원 (총사업비 1조2000억원), 대불산단 AX 실증 협업 플랫폼 구축 20억원 (총사업비 220억원), 철강·금속산업 인공지능 전환 (AX) 지원센터 구축 28억원 (총사업비 220억원), 여수국가산단 AX 실증산단 구축 20억원 (총사업비 205억원) 등이다.

전남도는 또 우주산업 관련 예산도 대거 확보해 글로벌 우주 강국의 핵심 거점

으로 발돋움할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사업은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구축 20억원 (총사업비 485억원), 국방 발사지원시설 구축 6억 5000만원 (총사업비 417억원), 민간 발사장 1·2단계 조성 112억원 (총사업비 1705억원),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구축 27억원 (총사업비 274억원) 등이다.

이들 사업은 전남 우주산업 인프라 확

충과 민간기업 참여 촉진을 통해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이번 국비 확보로 AI와 우주산업을 빠르게 추진할 든든한 디딤돌을 마련했다”며 “전남이 대한민국 AI·에너지 수도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강기정 광주시장이 16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광주명장·기술장 등 인증서 및 상품 수여식에 참석해 인증서 및 상패를 수여한 후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광주경제 이끈 우수기업·기술인 ‘시선 집중’

광주형일자리 3곳·일자리우수 16곳·우수 중기인 5명 선정

광주명장 ‘미용’ 이정례…‘기술장’ 김재호·정경복·장기홍씨

광주시가 올 한 해 지역경제에 이바지한 우수 기업과 기술인들을 선정해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광주시는 1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형일자리기업 3개사, 일자리우수기업 16개사, 우수중소기업인 5명, 광주명장 1명, 기술장 3명에 대한 ‘인증서 및 상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광주형일자리기업으로는 사전 적격성 검토, 서류심사, 현장점검, 위원회 심사를 거쳐 한국알프스㈜, ㈜나눔테크, ㈜신성테크 3개 기업이 선정됐다. 2022년 예비선도기업으로 선정됐던 한국알프스㈜는

선도기업으로 인증하고, ㈜나눔테크와 ㈜신성테크는 신규 예비선도기업으로 등록했다. 이로써 광주시는 지난 2018년부터 총 35개 기업을 광주형일자리기업으로 선정했다.

광주형일자리기업은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관계 개선 등 4개 지표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온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선정한다.

광주시는 광주형일자리기업의 정규직 종사자 수 규모에 따라 2000만원~1억원의 인증 지원금을 제공하고, 2년간 13종

의 행정·제정적 혜택을 제공한다.

일자리우수기업은 2년 이상 운영 중인 광주지역 기업 중 한해 동안 고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업 16개사가 선정됐다.

일자리우수기업은 ㈜부각마을, 정평시스텍㈜, ㈜아토모스, ㈜지용금융, ㈜지용, ㈜무진기업, ㈜정상에이치씨, 에스마이스연구원, ㈜유투, 예술유통협동조합, 나코스(유), ㈜카라멜라, ㈜선우, 레피소드㈜, ㈜195에프앤비, ㈜현대하이텍 등이다.

또 광주시는 기술력이 우수하고 고용창출 등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인 5명(강철원 ㈜유투 대표, 김춘에 ㈜송강 대표, 마상동 ㈜다원물산 대표, 김순곤 ㈜천복금형 대표, 김범안 ㈜195에프앤비 대표)을 우수중소기업인으로 선정했다.

광주명장으로는 미용분야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 지역 숙련기술 발전과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기여한 이정례 ‘이정례 헤어명작’ 대표를 선정, 인증서·현판을 전달하고 5년간 기술장려금 1000만원을 분할 지급한다.

올해의 기술장에는 김재호 ㈜지아이엔텍 이사, 정경복 (유)에니체 이사, 장기홍 동진기업㈜이사 등 3명을 선정해 기술장패를 수여하고 장려금 각 600만원을 3년간 분기별 분할 지급한다.

기술장은 광주 중소 제조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신기술 개발·품질관리 활성화와 실적이 우수하거나 생산성 향상·불량률 저감에 기여한 사람을 선정한다.

강기정 시장은 “좋은 일자리 창출과 끊임없는 기술개발·연구로 광주를 이끌어준 기업·기술인들 덕분에 광주가 풍성해졌다”며 “광주시가 마중물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니, 앞으로도 광주 산업을 넓고 깊게 만들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여객기참사 ‘부모 사망’ 유족에 상속세 공제를”

여야, 12·29여객기참사특위서 제기…30일 결과보고서 채택

여야는 16일 12·29 무안공항 여객기참사로 부모를 잃은 유가족에 대한 상속세 공제를 검토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번 사고로 고아가 된 유가족이 상속세 부담으로 집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는데 이번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윤 의원은 “아버지 사망한 후 어머니가 사망하면 어머니에게 먼저 상속되고 상속세 공제 금액이 생긴다. 하지만 동시 사망인 경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자녀가 세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원 김은혜 의원은 “1997년 8월 광

에서 대한항공이 추락한 사고(225명 사망) 때도 과확 검증을 거쳐 순차 사망을 인정받아 억울한 상속세를 내는 일이 줄었다”며 “국토부가 이렇게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가 동시에 사망해 고아가 되는 경우 상속공제를 적용해주는 특례도 있는데, 이 특례 적용에 대한 세제안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참사 유족에 대한 지원방안 등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전남도, 벼 깨씨무늬병 피해 복구비 183억 확정

내년 1월까지 지급

지역별로는 고흥 3142ha, 신안 2403ha, 장흥 1993ha, 해남 1925ha, 영암 1694ha 순이었다.

전남도는 전국 최초로 벼 깨씨무늬병 피해 인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전국 단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정부는 전국 피해 농가에 총 436억원의 복구비 지원을 확정했다.

이중 전남도 지원 규모 183억원은 전국 의 42%에 달한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전남도의회,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 의결

전남도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을 의결했다.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은 광역연합을 추진할 사무와 운영 방향, 사무 개시일 등을 담은 법인의 정관과 성격이 비슷하다.

앞서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0월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을 심사했지만, 의원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보류한 바 있다. 당시 의원들은 광역의원 의원 구성 비율을 문제 삼아 심사를 보류했으며 결국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운영 예산

15억원도 삭감됐다.

결과 내년 초 예상했던 광역연합 출범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지만, 이날 규약안이 의결되면서 광역연합 구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행안부의 심의를 거친 뒤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해 본격적인 광역연합 출범을 준비하는 한편, 삭감된 광역연합 운영예산 15억원은 특별회계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 초 추경을 거쳐 확보할 예정이다.

이현규 기자

이대통령 “외국인 카지노, 호남엔 왜 없냐”

“국가가 허가해 돈 버는 것…공공영역에 내줘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외국인 상대 카지노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 “상당한 이익이 생겨나는데, 민간이나 특정 개인에 내주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문체부가 나중에 정책 결정할 때 참고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상대 카지노에 대해 “이게 사실 도박 이잖냐”며 “국가가 특수한 목적에 도박을 허가해 돈을 벌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허가를) 왜 개인에게, 특정 업체에 내주냐. 그러니 특혜라고 한다”며 “이런 건 공공영역에 내 주고, (그러면) 수익을 공적으로 유익하게 쓴다는 것 아

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두현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장으로부터 그간 정부가 외국계 회사에 카지노 인허가를 내준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호남에는 (카지노가) 없더라”며 “왜 없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최희영 문체부 장관은 “지자체에서 희망 신청은 들어오는데, 수요조사 등 실무 검토는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관광 수요가 없다(는 판단이나)”며 “지방정부는 왜 해달라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최 장관은 “(카지노가) 없으면 (관광객이) 더 오지 않겠냐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탈모약, 생존의 문제…건보 적용 검토하라”

이대통령 “재정부담 크다면 횡수·총액 제한해서라요”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며 건보 적용 가능성을 질문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원형탈모 등은 치료를 지원하지만, 유전적 요인으로 생기는 탈모는 의학적 치료와 연관성이 떨어지기에 건보 급여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유전병도 유전에 의한 것 아니냐”며 “이걸 병이라고 할 것이냐 아니냐의 개념 정리 문제 아니냐. 논리적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재차 물었다.

정 장관은 “증상이 있거나 생명이 영향을 주는 질환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라며 “미용적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도 건보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탈모가) 옛날에는 미용 문제라고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무한대 보장이 너무 재정적 부담이 크다면 횡수나 총액 제한을 하는 등 검토는 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의료보험으로 지정하면 약값이 내려간다고 들었다”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한번 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2022년 대선에서 탈모 치료약의 건보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탈모로 고민하는 이들 사이에 화제가 된 바 있다. 다만 올해 대선에서는 이를 공약으로 내걸지는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를 소개하면서 “(지급도) 제게 ‘왜 약속 안 지키냐’고 하는데 ‘저번에 약속했지만 이번에는 안 했다’고 말하기 어려워 ‘아, 네’ 하고 넘어가곤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1면 ‘광주 군공항’서 계속

1조원 지원금도 주요 쟁점이다.

정부와 광주시가 각각 3000억원, 1500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5500억원은 종전부지 매각대금(기부대양여 잔여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정부가 공적기금 활용을 비롯해 농지전용 부담금과 각종 개발부담금 감면, 금융비용 지원에 대한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군 공항 부지 개발 시행 주체도 관건이다. 10년 동안 5조 원의 차입이 불가피한 구조여서 민간기업으로선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공기업 등이 참여하는 SPC(특수목적법인)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SPC 구성 문제로 난항을 겪는 대구 사례가 단적인 예로 언급되고 있다.

SPC와 LH, 정부 지원이 패기지로 움직일 때 사업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취지로 워한다.

광주송정~무안공항~목포를 잇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78.3km) 개통 시점인 2027년 전, 늦어도 2028년 안에 민간공항을 이전키로 한 합의도 무안공항 재개발 시점, 일부 시민단체 반발과 맞물려 관심사 중 하나가 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특별법 개정이 진행중이고, 정부가 지원할 다양한 수단도 논의되고 있다”며 “다만, 1조원은 광주시에 산해서 그냥 떼어 내 주는, 즉 기존 부채 2조원에 1조원을 엮는 것이 아니고, 부지 개발 차이 등을 통해 만들어지는 돈”이라고 설명했다.